

한국 양계산업의 최근 동향과 변화전망



서 옥 석 과장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 가금과

1. 축산업의 흐름을 주도하는 FTA와 소비자

우리나라 축산업의 생산액은 2000년 8조1천억원에서 2005년 11조8천억원으로 5년 사이 45.6%의 성장세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농업생산액중 축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25.2%에

서 33.5%로 증가했는데, 축종별 생산액 비율은 각각 돼지 31.9%, 한·육우 26.8%, 닭 18.7%, 젖소 13.2%를 각각 차지한다.

이렇게 괄목할 만한 축산업의 성장은 지난 동안 수많은 난관을 극복한 결과이다. 현시점에서 축산업계의 가장 큰 관심사는 FTA관련 동향이 며 새로운 난관으로서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로 등장했다. FTA를 통해 우리나라 축산에 큰 영향이 예상되는 국가는 미국, 캐나다, EU, Mercosur¹⁾등이다.

또 다른 과제는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문제이다. 이제 소비자는 최종 결정자로서 산업발전의 향방을 결정하는 절대적 요소이다. 각 국의 축산물이 매장에 진열되는 상황에서 가격이던 품질이던 차별화에 성공하지 못하는 생산자는 존립이 어려워질 것이다.

〈표 1〉 2007년도중 주요국과의 FTA 추진동향

타결예상국	협상 개시국	협상준비국	협상중단국
ASEAN ²⁾ , 캐나다, 인도, 미국	EU	호주, 뉴질랜드, Mercosur	일본, 멕시코

* 기체결사항 : 칠레(2004. 4. 1 발효), 싱가포르(2006. 3. 2 발효), EFTA³⁾(2006. 9. 1 발효), ASEAN(2006. 4. 상품분야 체결)

1) 양계산물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의 FTA

○ 'FTA'란 무엇인가?

국가간 자유무역을 추구하고 국제교역질서를 주관하는 국제기구로서 WTO가 있다. 현재 148개 국가가 회원국으로 가입되

1) Mercosur : 1995년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4개국이 발족한 경제협력기구

2) ASEAN : 1967년 동남아시아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기반확립을 목적으로 설립된 협력기구로서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타이,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등 10개국이 가입되어 있음.

3) EFTA : 서유럽의 지역경제기구로서 1960년 설립됐으며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등 4개국이 가입되어 있음.

어 있는데 회원국간에는 차별없이 동일한 교역조건을 준수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즉 한 회원국에 20% 관세를 적용한다면 다른 모든 회원국에 대해서도 관세가 같아야 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은 협상을 체결한 국가끼리만 관세를 철폐하는 등 다른 국가와 차별해 특혜를 주는 배타적인 성격의 협정이다. 모든 나라에 대한 닭고기 수입 관세가 20%라 하더라도 FTA를 체결한 국가간에는 관세를 낮추거나 아예 철폐할 수 있게 된다.

○ 왜 FTA를 추진하는가?

우리나라는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와 WTO(World Trade Organization)로 대표되는 다자무역체제의 가장 큰 수혜국으로서 대외교역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이다. 2006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에서 대외교역(수출+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69.8%이다. FTA추진은 우리나라가 기존 수출시장을 유지하고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채택된 것이다.

○ 우리나라의 FTA 추진동향은?

정부는 안정적인 해외시장 확보 및 개방을 통한 우리 경제의 경쟁력 강화 목적에서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등과 FTA 체결을 완료하고, 미국과의 FTA 협상을 타결(2007. 4월)했으며, EU, ASEAN(서비스·투자), 캐나다, 인도, 멕시코, 일본 등 41개국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러한 동시다발적 FTA 추진은 향후 2~3년이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과의 FTA 체결이 FTA 정책의 대미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중국과의 FTA는 2007년부터 산·관·학 공동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연구결과에 따라 공식협상 여부가 결정되어 빠르면 2008년부터 협상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그밖에 호주, 뉴질랜드와의 FTA도 2007년부터 민간공동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일본 및 멕시코와의 FTA 협상은 농산물 분야의 시장개방 폭과 관련된 입장차이가 커 교착상태에 있다.

○ 이 가운데 한·미 FTA 협상 타결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를 비롯한 주요 경제권에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2006년 2월 협상 개시선언 이후 2006년 6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여덟 차례의 협상과 고위급 협의를 거쳐 지난 6월 30일 양국 정부가 미국 워싱턴에서 협정문에 서명했다. 이후 양국 행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국회 비준을 요청하게 된다. 양국 국회에서 일부 비준 반대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미국의

〈표 2〉 FTA결과 관세철폐 여부에 따른 닭고기 수급전망

구분	단위	2006	전망(FTA미체결 / FTA체결)		
			2007	2013	2017
사육수수	만수	6,533	6,667	7,265 / 7,233	7,708 / 7,652
생산	천톤	314	330	360 / 354	383 / 371
수입	천톤	77	78	99 / 112	122 / 140
1인당소비량	kg	8.0	8.3	9.2 / 9.4	10.0 / 10.3
산지가격	원/생 체 kg	1,195	1,127	1,383 / 1,314	1,437 / 1,295

*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표 3〉 한·미 FTA 타결 내용

품목	현행	협상결과
닭고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닭 : 18~20% - 냉장육 : 18% - 냉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슴, 날개 : 20% • 다리, 기타 절단육 : 20% • 가공품 :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 철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닭, 냉동(가슴, 날개) : 12년 - 냉장, 냉동(다리, 기타) : 10년 - 닭고기 가공품 : 10년
계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란 : 41.6% - 전란액 : 27% - 난황 : 27% - 종란 : 27% - 난백 :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 철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란, 전란액 : 15년 - 난황 : 12년 - 종란 : 10년 - 난백 : 5년

정치 일정 등을 고려할 때 2007년 하반기 중에 비준동의안이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의 비준이 완료되면 한·미 FTA는 빠르면 2008년 하반기에 발효될 가능성이 있다.

○ 한·미 FTA 타결에 따른 영향을 분석해 볼 때 5년 후 미국산 닭고기(냉동닭다리, 기타 냉동절단육) 수입가격은 8.3% 하락하고, 20%의 관세가 철폐되는 시점에서는

16.7% 정도 하락할 전망이다.

○ 국내산 닭고기 가격과 생산량 변화를 보면 관세가 50% 수준 감축되는 5년 후 국산 닭고기 가격은 3.7~6.3% 하락하고, 생산은 1.2~2% 감소가 예상되며 관세가 완전 철폐되는 10년 후에는 국산 닭고기 가격이 7.3~12.5% 하락하고 생산은 2.3~4% 감소할 전망이다.

2) 최종 선택자로서 분명한 품질을 요구하는 소비자

- 각 가정에서 축산물은 중요한 구매품으로 자리매김되어가고 있다. 또한 산업화와 더불어 시작된 소비자 중심사회로의 전환은 사치품 → 취미재 → 공산품에 머물러 있다가 우리나라의 식생활패턴이 곡물중심에서 육류다소비 형태로 변화하면서 축산물까지 범주에 포함되어 있다.
- 축산물을 대하는 태도는 안전성을 우선하면서 건강유지에 큰 관심을 두고 있으며,

구매단위의 소량화 및 고급화가 하나의 소비패턴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 이러한 추세에 따라 소비자의 감시기능은 점차 강화되고 언론과 더불어 구체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최근의 언론보도는 그 사례라 할 수 있다<그림 1>.

<환경스페셜 동물농장 2부작, “산란기계, 닭”(KBS1 TV)>

• 일시 : 2007. 5. 30(수) 10:00~

• 내용 : 케이지 밀사, 부리자르기, 강제환우 등

<이영돈 PD의 소비자 고발 “넘쳐나는 브랜드 계란 효과 있나?”(KBS1 TV)>

<표 4> 1인 1일당 육류섭취량(g) 증가 추이 국제비교

구분	1972~1974(A)	1982~1984	1992~1994	2003(B)	증감률(B/A)
한국	17	47	100	145	752.9
일본	65	93	118	128	96.9
중국	31	48	95	152	390.3
미국	310	316	333	343	10.6
프랑스	256	286	298	305	19.1
뉴질랜드	320	278	330	306	4.4
아르헨티나	267	282	267	281	5.2
북한	22	31	34	33	50.0

* 자료 : 소비자보호원

<그림 1>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소비욕구와 관심사 변화 모식도

구분	과거	현재
식품적 위치	○ 부식·기호·사치성식품	⇒ ○ 건강유지식품인 동시에 일상 필수식품
소비 성향	○ 가격이 최우선	⇒ ○ 안전 안심 고급성 ○ 생산 환경의 차별성
소비자 문제	○ 조작, 매점매석, 폭리	⇒ ○ 화학적, 생물학적 안전성 우려 ○ 원산지 확인 욕구 ○ 전자상거래, 홈쇼핑, 오픈마켓 등에 의한 피해

- 일시 : 2007. 6. 29(금) 10:00~
- 내용 :
 - 브랜드계란, 기능성계란, 영양란과 일반란의 성분 비교
 - 브랜드계란 등의 생산 및 유통문제 지적
 - 성분대비 비싸게 파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
 - 결국 소비자를 기만한다는 내용으로 결론

○ 소비자들의 안전성에 대한 예민한 반응 사례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경우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2003년도 국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 육계가격이 28.7% 하락했으며 2005년도 유럽, 동남아시아 등 해외 발생 보도만으로도 19.6%가 하락했다. 2006년도 12월 국내발생 때에는 또다시 33.1%까지 하락했다.

한국산과 외국산 축산물이 공존하고 있는 시장상황에서 안전식품 생산은 경쟁력 확보의 관건이란 인식하에 정부와 생산자들은 여러 가지 자구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부는 2004년 12월 사료내 혼합 가능한 동물용의약품종류를 53종에서 25종을 줄인데 이어 내년 4월 1일부터는 7종을 추가 제한하는 내용의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 일부개정안을 입안예고(2007년 7월 27일

자)했다.

한편 전국한우협회는 전국주부교실중앙회 소속 명예감시원 40명과 음식점 등에 대한 원산지 단속을 함께 전개하기로 합의(2007년 7월 20일)했으며, 소사육단계 HACCP제도가 금년 9월부터 도입된다.

2. 양계산업 발전에 관한 농가의 문제인식 (2007년 4월부터 3개월간 대면조사)

FTA와 소비자가 주요 결정자로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양계산업에 종사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산업발전대책에 관한 의견을 여러 기회를 통해 들어보았다. 그 내용을 정리했는데 안전성 제고, 브랜드화, 기능성화 등 품질과 관련된 요구보다는 산업부양책에 대한 관심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1) 양계업계의 자구책으로서 농협조직, 협회 등을 통한 계도활동 필요
 - 성수기와 비수기를 나누어 수량을 조절하는 계획적인 사육
 - 가격하락시 무절제한 출하 및 덤핑판매와 외상판매 지양

〈표 5〉 국내외 SI발생에 따른 육계가격 변화

비고	2003년(국내발생)			2005년(해외발생)			2006년(국내발생)		
	발생전 (11월)	발생후 (12월)	하락률	발생전 (8월)	발생후 (9월)	하락률	발생전 (11월)	발생후 (12월)	하락률
가격지수	100	71.3	28.7%	100	80.4	19.6%	100	66.9	33.1%

*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종계농장의 적정수수 생산조절을 위한 협회중심의 쿼터제 실시

2) 임의 자조금 또는 기금 조성

- 축산물의 소비홍보 강화 및 수급조절 제도를 정착
- 생산자 주도의 가격안정 여건 마련을 위한 재정기반 확충

3) 5년 이내에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

- 단체급식에 국내산 닭고기, 계란 사용의 무화
- 원산지 표기 철저 및 미이행시 처벌 강화
- 친환경 축산물을 사용시 정부 보조금 지원
- 1종 법정전염병 발생시 현실가 보상
- 정부의 방역시스템 강화
- 다양한 질병에 대한 방역장비 및 소독시설 지원과 교육 강화
- 계란 집하장 확대를 통해 냉장위생란 유통, 등급판정, 유통손실방지책 강화 추진

4) 중·장기적 정책추진이 필요한 사항

- 조세감면정책 : 폐업시 토지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면세유를 공급의 영구세법화, 축산부지 용도지정 폐지 및 세금제도 완화 등
- 닭고기 부분육 시장의 확대 강화(대형육계 사육여건 마련)
- 폐업보상금 지급을 현실성 있고 간소한 절차로 제도화
- 시설자금 지원 : 후취담보제도 확대, 계열

주체위주 지원 → 개별농가 지원

- 양계업 쿼터제 실시를 통해 무분별한 신규 시설 및 투자의 규제
- 수입축산물에 대한 부과금을 축산발전기금으로 흡수하여 산업발전에 기여
- 뉴캐슬병 의무 예방접종과 가금티푸스 예방접종 등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3. FTA와 소비자는 양계산업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 것인가?

최근 미국과의 협상이 타결됐으나 이는 시작에 불과하고, 후속국들과의 타결이 이어지면서 위기극복 내지 기회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아래와 같은 다양한 시도가 시작될 것이다.

가. 정부에서는 정치·산업적 이유에서 다양한 부양책을 추진할 것이며, 이때 정책개발, 투자에 따른 시행착오 최소화, 투자평가 등에 필요한 조언자로서 국가(책) 연구기관이 경영 기술분야에서 구체적 역할을 해 줄 것을 요구할 것이다.

나. FTA는 상대국 시장의 확보책으로서 기술 서비스 기능을 내세울 것이다. 정보력이 풍부한 산업계와 단체는 FTA에 대한 정서적 반대에서 실리적 자구책 추구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기술·정보의 매개역(媒介役)이 되고, 결국 수입기술과 국산기술의 엄정한 평가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다. 농가는 계열업체 소속이나 자가경영 방식이냐에 따라 확연한 형태적 차이를 지

니게 될 것이다. 특히 자가경영 농가는 소량 다품목 브랜드 제품의 틈새시장 개척자로서 폭넓은 기술·경영적 스펙트럼을 나타내게 되고, 이러한 농가들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조직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라. 정책으로 추진되는 「닭고기 개별포장제」 「계란생산이력제」 「닭사육단계 HACCP」 「축산브랜드 지원사업」 등은 정착단계까지 일부 혼선에 따른 논란이 제기될 수 있으나, 가금산물의 차별화와 품질제고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마. 최근 발효된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도 및 다양한 「브랜드 제품」 육성사업은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시도이지만 생산물의 분명한 차별화가 미흡할 경우 국산 양계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한꺼번에 잃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바. 국가연구기관은 아래 현안 사항에 대해 제때 정답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양계분야의 종자 예측문제를 탈피할 수 있는 품종작출 및 이를 이용한 산업화체계 구축 문제, 수입 닭고기에 대응한 부분육생산용 고품질 대형 닭고기 생산기술 실용화, 무(저)항생제 사육기술 정립, 닭고기 개체포장시 문제가 되는 이상 도체의 발생 최소화 기술 제시, 산업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기능성 양계산물용 사료개발 및 사양체계 완성 등이 조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판단된다.

4. 맺음말

국내외적으로 만만치 않은 도전이 양계산업이 나아가는 길목마다 도사리고 있다. 시장개방이 눈앞에 닥쳐있고 악성질병이 연례적으로 발생하여 국내 소비시장에 타격을 주고 있다. 산업현장은 시도 때도 없이 닥쳐오는 현안을 해결해 나가면서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무거운 짐을 차질 없이 끌고가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양계인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할 과제를 아래와 같이 정리하고자 한다.

가. 생산성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기본사항을 준수하고 성실한 사양관리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런 바탕에서 신기술을 도입해 생산비를 절감하고 고품질의 산물을 생산해 튼튼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나. 소비자의 요구를 만족시키는데 생산 활동의 목적을 두어야 할 것이다. 시장과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 제품을 생산하고 소비자의 수요에 맞춰 기능성을 강화하며 소비자가 쉽게 취급 이용이 가능토록 편리성을 강화하는 노력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다. 안전성과 환경친화적 생산 활동을 지향해야 한다. 환경을 훼손하고 식품안전성을 무시하는 생산 활동은 국민들에게 용납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양계인 모두가 명심해야 할 것이다. 